

프랑스 FRANCE

세계 최초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 포함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2024년 3월 초,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본 개정안은 마크롱 정부가 헌법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일 열린 특별 합동회의에서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최종 통과되었다.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안은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512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프랑스 헌법(제5공화국 헌법) 제34조에 개인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 프랑스 사법부 장관 에릭 듀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이 수정된 헌법을 인장하고 봉인하는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수정된 헌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에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마련된 공식 석상을 통해 "오늘 기념식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시민 및 거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장이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위 개정을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반면, 여전히 여러 규제를 적용하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임신중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이미 임신중지를 합법화하였다. 1975년 제정된 법에서는 임신 10주 차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했고, 이후 2001년에는 임신 12주, 2022년에는 임신 14주까지로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허락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은 국가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참고자료

- DW(2024.3.4) "Why France enshrined abortion rights in its constitution", <https://www.dw.com/en/why-france-enshrined-abortion-rights-in-its-constitution/a-68436705> (접속일: 2024.3.23.).
- European Parliament(2022.7.7), "Include the right to abortion in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demand MEP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701IPR34349/include-the-right-to-abortion-in-eu-charter-of-fundamental-rights-demand-meps> (접속일: 2024.3.23.).
- France 24(2024.3.4) "France enshrines abor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historic vote",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40304-france-to-enshrine-abortion-rights-in-country-s-constitution> (접속일: 2024.3.23.).
- France 24(2024.3.8) "France seals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on International Women's Day",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308-france-s-macron-to-seal-abortion-becoming-constitutional-right> (접속일: 2024.3.23.).

- 프랑스 의회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이미 임신중지 권리가 합법인데 굳이 헌법에까지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그러나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합법인데도 프랑스 정부가 헌법을 수정하고자 한 데는 미국의 최근 사례가 주요한 정치적 동기로 작용했다.
-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로 앤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임신중지가 금지되거나 상당 수준 제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실제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인 2022년 6월 9일, 찬성 324표, 반대 155표, 기권 38표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유럽 내에서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가능하더라도 향후 극우 정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 제도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었다. 2022년 11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가 프랑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사실 통과되기까지는 상·하원 간 개헌안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었다. 이후 마크롱 정부가 개헌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서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마침내 특별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 투표에서는 프랑스 내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의원과 많은 보수성향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프랑스에서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포함하게 된 것은 분명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것처럼, 유럽연합 차원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개인의 기본 인권으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하게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우정당 출신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현 이탈리아 정부는 임신중지 권리를 확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포함한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해당 주제로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지켜볼 만하다.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관련 안전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2024년 3월 24일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Queen Elizabeth University Hospital) 앞에서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해당 시위는 주로 미국 텍사스에서 온 사람들 100여 명이 모여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침묵 기도'를 40일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년간 글래스고(Glasgow)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들을 저지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시위를 두고,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던 '안전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 개요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은 공식적으로 '임신중지 서비스 안전 접근 법안(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Bill)'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5월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에 의해 발의되었다. 안전 접근 구역 법안은 의료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ves)'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으로부터 병원에 찾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 반대 활동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스코틀랜드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주변 반경 150미터에 걸쳐 안전한 접근 구역을 설정하여 임신중지 반대시위와 같은 특정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신속한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

- 스코틀랜드에서는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물러서라(Back Off Scotland)' 단체와 같은 옹호 단체는 해당 법안이 임신중지를 장려하여 새로 태어날 생명을 해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진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이 단체와 입장이 같은 텍사스 기반의 임신중지 반대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 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재생산 권리 지지자들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Queen Elizabeth University Hospital)의 컨설턴트인 그렉 이윈 박사(Dr. Gren Irwin)는 이러한 시위자들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비난하며,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환자와 직원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강조하며, "이 시위들로 인해 조성된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래픽 플래카드의 존재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표현했다.

참고자료

- Law Society of Scotland(2023.12.), "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Scotland) Bill", <https://www.lawscot.org.uk/media/1hjhojs/23-12-20-hea-equ-crim-chr-abortion-services-safe-access-zones-s-bill-written-evidence.pdf> (접속일: 2024.03.25).
- BBC (2023.06.15.), "Abortion clinic 'buffer zone' bill lodged in Scottish Parliament", <https://www.bbc.co.uk/news/uk-scotland-65914694>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3.25.), "Anti-abortion protestors accused of repeated harrasment as 100 gather outside Scots hospital",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anti-abortion-protestors-accused-repeated-32433957>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9.21.), "Doctor backs urgent call for buffer zones at Scots abortion clinics as protesters to target hospitals",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doctor-backs-urgent-call-buffer-30996387> (접속일: 2024.03.25).
-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2024.), "Safe Access Zones Scotland - our campaign to introduce safe access zones in Scotland", <https://bpas-campaigns.org/campaigns/safe-access-zones-scotland/> (접속일: 2024.03.25).

-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는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인권 단체들은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임신중지시설 근방에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단순한 입법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긴급한 사안이며, 의료 접근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입법 조치가 실제로 임신중지를 위해 의료시설에 방문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험자 유사프(Humza Yousaf) 장관과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은 임신중지 반대 시위로부터 의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입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이러한 임신중지 반대시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레논(Monica Lennon) 노동당 의원도 스코틀랜드 정부에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합류했으며, 입법 지연이 임신중지 시설을 찾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몇 개월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약속했다.

-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발의한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 (Safe Access Zones Bill)’에 반대하는 일부의 입장이 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입법 절차가 정부 발표 내용처럼 몇 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스코틀랜드에서 재생산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주,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권한 확대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는 2024년 3월 중순 무렵 새로운 '경찰 효율성 법(Policy Efficiency Laws)'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에 별도의 신청없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즉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와 관련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간 호주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는 등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 및 아동 보호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호주 내 가정폭력 문제는 '국가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될 만큼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퀸즐랜드(Queensland)주의 경우, 경찰 출동 신고의 40%(2021년 기준)는 가정폭력 사건이며, 2019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가정폭력 집중 단속 기간(Operation Amarok V, 2024년 2월 시행)에 590명이 중대한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었고, 1,183건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만큼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호주 각 주(State)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 주별 관련법에 따라 경찰의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빅토리아(Victoria)주의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에 도착하여 임시보호조치(Family violence safety notice)를 발부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발부 이후 14일 이내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명령(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 및 기소 조치를 한다.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처분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을 통해 가해자에게 임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한다. 임시 구금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 남호주(South Australia)주에서는 경찰 혹은 법원이 임시 개입 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추후 가정폭력법원(Specialist Family Violence Court)에서 진술 청취 후 정식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 ABC News (2022.4.14). "NSW Police officers convicted of domestic violence have kept their jobs, despite the force's claims of 'zero tolerance'". https://www.abc.net.au/news/2022-04-14/nsw-police-officers-convicted-domestic-violence-kept-jobs/100982038?utm_campaign=abc_news_web&utm_content=link&utm_medium=content_shared&utm_source=abc_news_web (접속일: 2024.3.16).
-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2024.03.01).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 Scheme", <https://www.ag.gov.au/families-and-marriage/families/family-violence/national-domestic-violence-order-scheme> (접속일: 2024.3.17).
- State government of Queensland (2024.2.1)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inforce/current/act-2012-005> (접속일: 2024.3.16).
- The Guardian (2024.3.1) "Queensland police to be granted power to instantly issue year-lo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feb/29/queensland-police-domestic-violence-laws-new-efficiency> (접속일: 2024.3.6).
- 9News(2024.2.12) "Almost 600 people 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 offences in four days in NSW", <https://www.9news.com.au/national/new-south-wales-news-police-arrest-almost-600-in-domestic-violence-blitz/1710470b-804b-40a8-91c7-0003d489bcca> (접속일: 2024.3.6).

이와 같은 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연방법원에서는 국가 가정폭력 명령 체계(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s Scheme; NDVOS)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11월 25일 이후 발급된 가정폭력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s)은 거주지 외 타 주(state) 및 준주(territory)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여 피해자가 동일한 사후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이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지방 법원을 통한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이 최초 발생한 지역 내 법원일 필요는 없다.

호주 내 각 주별 가정폭력 관련 법안의 내용,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초기대응 범위가 상이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경찰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 방안과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